민노총, 정부 만류에도 대규모 집회 '강행'

금지 인원 500명 피하려… 경찰에 499명 '쪼개기 신고' 꼼수

450여명 참석 추정, 명단 없어 확진자 발생 시 '파악' 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세종시 어진동 기획재정부 앞 집회를 마치고 국무조정실 앞까지 행진 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름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위며,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 해 달라"라며 강경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럼에도 민주노총은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앞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집회를 강행했다.

세종시는 집회 당일인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명 이하 집회 및 행사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자정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100인 이상 집회 등이 금지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와 관련, 경찰에 집회 인원을 499명, '쪼개기'로 신고해 법적 기준인 500명을 피해갔다.

경찰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을 45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부터 전세 버스를 이용 '전국'에서 집회를 위해 모여들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강행한 대규모 집회에서 참석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사진 등을 바탕으로 집합 인원과 다른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민주노총으로부터 이날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파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건강보험 공단 앞에서 오늘 23일 120명, 30일 3000명이 참석하는 또 다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 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사상자 19명' 불법 개조 탁송차 운전자 영장 신청

경찰이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을 사상케 한 탁송차 운전자가 화물칸을 불법으로 늘린 것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1일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몰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5.3t 탁송차(트레일러) 운전자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56분께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탁송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입한 탁송차 화물칸을 불법으로 늘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칸을 늘린 상태에서 완성차 5대(소형차 3대·승용차 1대·SUV 1대)를 싣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내리막길에서 (서시장 쪽으로)우회전하기 위해 내려오다가 제동장치가 작동이 안 됐다"고 진술했다. 또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개조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 탁송차에 실려 있던 승용차 1대가 떨어지면서 차량 고박(화물고정) 부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A씨는 부실 고박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중 A씨 탁송차가 정기 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불법 개조 ▲제동장치 작동 ▲부실 고박에 대해 수사한다.

교통안전공단은 22일까지 A씨 탁송차의 등록증·실제 적재 구조물 길이를 비교해 '불법 개조'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여수=오상호 기자

5·18유족회 보조금 리베이트 의혹…경찰 수사 착수

광주시, 보조금 집행 관련 비위 수사 의뢰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집행부가 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광주시는 5·18유족회 집행부가 지난해 보조금 집행 뒤 일부를 후원금 형태로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5·18유족회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보여진다고 판단,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5·18유족회는 해마다 광주시로부터 해외 봉사활동 사업비 1500만 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난해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보조금을 국내 봉사활동 사업비로 전환했다.

5·18유족회는 전남 지역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난해 11월 보조금을 노후화된 해당 복지시설 개선 공사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적정 공사비(1200만 원)보다 단가를 높여 1500만 원으로 결제했고, 차액인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용도를 복지시설 개선 공사비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줬으나 공사비를 부풀려 집행하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쳤다. 구체적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봤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왜 내 뒷말해" 후배 폭행한 여중생 2명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후배를 불러내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학생 A·B(16)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B양은 지난 5월18일 오후 광주 모 아파트 정자로 후배 C(15)양을 불러내 신체 일부를 밀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B양은 C양이 A양에 대해 뒷소리를 한 것을 전해 들었다며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폭행 당시 A·B양의 친구를 포함한 8명이 정자 인근에 모여 있었으며, 이들은 C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A·B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폭행을 도우려고 같은 장소에 모였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비 기자

'방역수칙 위반' 해남 승려 과태료 부과

8명 과태료 10만원

방역 수칙을 위반한채 술과 음식을 먹은 승려와 업주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남군은 지역의 유명 사찰 승려 7명과 영업주 1명 등 모두 8명이 방역수칙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채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시 승려 7명과 숙박업소 업주 1명 등 모두 8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시행돼 해남군도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 첫날이었다.

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승려와 업주 등 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영업장은 운영중단 10일과 과태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숙박업소는 사찰 소유 건물로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21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날 자리는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장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마친 뒤 감사의 뜻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취재본부

"입도 금지된 섬에서 낚시 안돼요" 목포해경 16명 적발

출입금지 섬 '불법낚시'

목포해양경찰서는 섬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를 한 A(40)씨 등 낚시객 16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낮 12시2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의 출입이 금지된 탑섬과 띠섬에서 불법낚시를 한 혐의다.

현재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65개소로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